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혐의 부인... “살인죄 인정 못해”

재판 끝나고 나서는 길에 취재진에 답변 “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믿는다” 살인죄에 대해 “학대치사도 인정 안 해”

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입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장씨 측 변호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정인이를) 발로 밟았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을 믿는다”고 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형재) 심리로 열

린 입양모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에 대해서는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던뜨려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로 체중이 절단돼 600ml의 복강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조사 결과를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이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자기(피고인)가 안 밟았다고 인정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

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에 대해서 변호인은 ‘입양모의 학대사실을 전부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입양부가) 이제야 안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부는 (정인의) 팔을 억지로 손뼉을 치게 했다는 것, 그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사건인 것 알고 있다”며 “저희도 공감하고 마찬가지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은 변호인

의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진술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날씨 풀리자 세차장 찾은 시민 북극 한파가 물러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셀프세차장에서 한 시민이 세차를 하고 있다.

“강진 농협 미곡처리장 5000만원 쌀 횡령, 처벌하라”

미곡처리장 임직원 2명, 재고 쌀 28t 빼돌려 부당 수익

전남 강진 지역 농민단체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임직원이 쌀을 무단 판매해 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강진군농민회는 13일 오후 강진군 강진읍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앞에서 “강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보관된 쌀을 임의로 팔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농협중앙회 감사를 통해 강진농협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임원 A씨와 직원 B씨가 지난해 8월 창고에 보관한 쌀 28t을 업무 외적으로 민간 업체에 판매한 뒤 대금 5000만원을

횡령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어 “농협은 그동안 작황을 떠나 쌀값 폭락, 품질 문제 등을 들어 하락값을 낮게 책정해놓고선 뒤에서는 농민의 재산을 쟁겼다”며 “횡령 사건의 근본 원인은 운영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밀실 경영을 일삼아 온 ‘농협 적폐’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협 경영 보고서 공개와 회계감사를 통해 진상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양심을 저버린 농협에 공공재산 운영을 맡길 수 없다. 농민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사외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쌀 횡령의 진상을 알린 미곡종합처리장 직원 박모씨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숨졌다며 후속 대응도 문제삼았다.

농민회는 “농협 측은 비리 사실을 폭로한 박씨를 보호하지 않았다. 비리 현장에 방치된 박씨는 괴로움에 못 이겨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강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재고 쌀을 임의로 빼돌려 판매했다고 농협 이사회에 알렸다. 이후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농협중앙회는 다음달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의심자 104명 적발

국토부와 정밀조사 후 검찰 기소 등 형사 처분 예정

광주시는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고 불법거래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했던 동구 계림동 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 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전매제한 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

동산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전매 28건, 공급 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의 불법거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중 부모로부터 편법 증거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내 이들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

응반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 전매자와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분하고,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조인호기자

“렌터카 빌려간 애 어딴냐” 지인 감금폭행한 렌터카 업자들

렌터카를 빌려간 사람과 연관이 닿지 않자 그의 지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렌터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모텔 방에서 A씨 등 2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폭행)로 B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새벽 A씨 등 2

명이 머물고 있던 파주시의 한 모텔 방에 침입해 “친구의 소재를 말하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씨의 친구가 렌터카를 빌려간 뒤 연락이 끊기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2명은 약 3시간 만에 모

텔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업자들이 연락이 끊긴 친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벌인 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